

## ◎ 토종 시험인증기관 국내·외에서 퇴출위기

지난 9월 1일 중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시험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증기관 관리방법' 개정안을 시행함으로써 지사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던 국내 시험인증기관들이 사실상 퇴출위기를 맞이하게 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회 지정위의 국감에서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은 “중국의 인증기관 관리 방법의 주요 골자는 중국 내에서 시험인증기관으로 인정받으려는 기관은 인증에 필요한 모든 시험검사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하고 자본금 5억 원에 파견인력이 아닌 중국인 정규직 인력 10명을 상주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존에 진출해 있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생활건설환경시험연구원 등은 모두 위기를 맞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시험인증기관들이 철수할 경우 인증을 받은 품목들에 대한 공장심사가 불가능해져 자칫 인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인증이 취소될 경우 이들 업체들은 최초 인증을 받을 때의 제품시험인증, 공장 심사 등의 절차를 모두 다시 거쳐야 하는데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모두 손해일 수밖에 없다. 당장 올 해 9월부터 12월 사이에 공장심사의 대상이 되는 업체 수는 1,157개에 달하며, 2010년 기준 수입액을 계산해 보면 KC인증의 경우 2,769억 원에 달한다. 기술표준원에서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현지 업체와의 하청계약 체결, 제도 유예와 함께 법인설립 및 상호인증 등도 고려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KC인증의 경우 공장 검사 등 일부 시험에 대한 하청계약 체결은 가능하지만 30~50%의 과도한 수수료를 물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나마 하청계약도 KC인증만 가능하다. 하지만 KC인증의 경우는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4조 5항 및 17조에서 지정심사기관과 인증기관 또는 인증협회 인증심사원으로 구성된 합동 심사반에서 공장심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어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하청계약마저 불가능하다. 국내 기관들이 퇴출위기를 맞은 반면 다른 외국계 시험인증기관들은 일찌감치 현지법인을 설립, 요건을 충족시켜 놓고 있어 이번 조치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고, 국내에서는 외국 국적의 다국적 시험인증기관에게 국내 인증시장의 절반 이상을 내줘 향후 국내에서도 설 곳을 잃을 위기에 처하는 등 사면초가에 빠졌다.

특히 국내 제조업 시험인증 비용의 경우 국내 전체 시장규모의 50.3%인 1조3,319억 원이 해외 시험인증기관에게 맡겨지고 있는데, 이는 국부 유출과 마찬가지로 인증획득을 위해 대부분 많은 양의 도면 및 기술 자료가 요구되는데 이는 합법적인 기술유출의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세계 시험인증의 트렌드는 기존의 관세장벽을 대신한 무역장벽의 역할과 동시에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데 반해 아직도 우리나라는 규제적 측면만을 강요함으로써 세계적 흐름에 뒤쳐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정부 기관 위주의 시험인증기관 육성과 대형화에만 매달렸는데 이제는 정책의 방향을 바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민간인증기관 활성화와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해 지고 있다. KEA